

## 2015년(제31회) 입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16명 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무려 12명(75%) 차지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는 16명이다. 올해 입법고시에는 모두 4,891명이 지원하여 평균 30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재경직의 경우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의 적용을 받아 당초 선발예정인원(6명)보다 1명이 많은 7명이 합격했다.

법률저널이 지난달 13일 발표된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6명의 출신대학을 파악한 결과, 서울대 출신은 전체의 31.3%(5명)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31.8%, 7명)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 10년간(2004~2013년) 서울대 합격자의 평균치(44.4%)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법률저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에는 서울대 합격자는 6명으로 46.2%를 차지했으며 △2001년 33.3%(5명) △2002년 40%(6명) △2003년 43.8%(7명)로 40%의 안팎에서 유지되었다.

하지만 2004년에는 26.3%(5명)로 '뚝'떨어졌고 2005년도는 24%(6명)로 통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06년 다시 45%(9명)로 회복세를 보였고 2007년에는 68%(17명)로 무려 23% 증가해 서울대 '씩씩이'현상을 보였다.

2008년 56.5%(13명)로 다시 주춤했지만 2009년에 또다시 60%(9명)로 올랐고 2010년(53.3%, 8명)에는 소폭 하락했지만 60%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이어갔다.

2011년에는 37.5%로 추락해 서울대의 위상이 흔들렸지만 이듬해 선전하면서 서울대 독주체제가 이어지는 듯 했으나 2013년 27.8%로 또다시 근래 들어 최저치를 기록해 서울대의 위상에 상처를 입었다. 지난해 반등은 했지만 2000년대 이후 역대 4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서울대 이어 2위를 고려대가 차지했다. 최근 2년간 연세대에 밀렸던 고려대는 올해 4명의 합격자를 내면서 2위 탈환에 성공했다. 연세대는 3명에 그쳐 2위 자리 수성에 실패했다. 연세대 합격자 3명 모두 재경직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특히 재경직 수석인 조가영씨도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서울대 등 소위 'SKY'출신은 75%(12명)로 다시 증가했다. 2010년에 이들 대학의 출신이 전체의 86.7%(13명)로 절대적이었지만 2011년에는 75%(12명)로 떨어져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되었으며 2012년에도 61.5%(8명)에 그쳐 이들 대학의 편중이 크게 완화됐다. 2013년 66.7%(12명)로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해 63.6%(14명)로 떨어졌다 올해 편중이 다시 심화됐다.

최근 SKY 출신의 비율이 7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2년부터 도입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2년에는 첫 도입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1명의 추가합격자를 냈으며, 2013년에는 일반행정과 재경에서 각 1명의 합격자를 냈다. 지난해와 올해도 재경직에서 1명이 추가합격했다.

연세대 다음으로 성균관대가 2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합격자를 내지 못했던 사서직에서 올해 합격자를 내 관심을 끌었다. 그 주인공이 성균관대 출신이었다.

올해 1명 이상의 합격자 배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학은 총 6곳에 그쳐 지난해보다 2곳이나 줄었다. 이화여대와 카이스트에서 각각 1명의 명단을 올렸다. 특히 일반행정 수석을 차지한 김나윤씨가 이화여대 법학과 출신이다. 카이스트는 재경직에서 합격자를 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7일 박형준 사무총장과 합격자들의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5급 신입사무관들은 11월 27일까지 12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배치된다.

(법률저널 인용)